

# 12·3 불법계엄 1년…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의 강한 메시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익산 새 시대 열 것”

“침묵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 수호 앞장

익산시장 출마를 위해 열심히 표밭을 갈고 있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3일, 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날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던 행동이 제 정치의 출발점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전북도민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는 “비상계엄의 부당함과 정권의 무도함 앞에서 공직자로서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었다”며 “저 최정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행동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북 지역 공직자가 가운데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신분이었지만, “정권 퇴진”을 외치는 1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3일, 불법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인 시위를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익산역 앞에서 진행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지방공기업 사장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일은 전례가 없다는 만류도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

며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직자이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도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올해 3월, 내란 상황이 이어지던 시기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주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다시 풀려나는 상황을 보며 ‘이대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비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천막 하나로 버티며 단식을 이어갔고, 결국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져 의료진 권고로 단식은 중단됐지만, 그는 “몸은 상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비상계엄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섰던 그 용기와 책임감으로 익산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다.

둘째는 ‘검증된 행정능력’으로 국토

부 차관 시절의 중앙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 “익산을 호남의 교통·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비상계엄 1년을 지나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치유 중이지만, 위기 이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전북, 특히 익산은 더 큰 소외와 쇠퇴를 겪었을 것”이라며 “어둠을 뚫고 국민이 승리했듯, 익산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비상계엄 당시 가장 먼저 행동했듯, 익산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뛰겠다”며 “위대한 익산의 새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익산시장 후보는 정현을 현 익산시장의 3선 이상 출마 제한에 걸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정호 후보 외에도 조용식 후보, 심보균 후보, 최병관 후보, 김수홍 후보와 조국혁신당 임형택 후보 등 쟁쟁한 후보들의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 “청렴에서 출발해 안전으로 완성되는 익산”

조용식 전 전북청장, 민생지원금 지급 이어 두번째 공약 발표

익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청렴에서 출발해 안전으로 완성되는 정의로운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익산 내 전 시민 1인당 10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용식 전 청장은 3일 익산시장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안전 기조에 부응해 익산을 대한민국 지역 안전 정책의 선도 모델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정·교육·소방·복지·시민단체가 즉시 연결되는 통합 공동 안전 컨트롤타워인 ‘익산형 통합 공동 안전 컨트롤타워 JSS(Joint Safety System)’를 구축하겠다”며 “이

를 통해 사고가 나면 대응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며 피해를 회복하는 정교하고 안전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얼마 전 발생한 익산시 간부 공무원의 뇌물사건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익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시민이 참여하는 상시 공공감시 시스템을 구성해 입찰 계약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청렴도시 익산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불편 제로 원스톱 통합 민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많은 시민과 기업인들이 익산은 민원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멘소리”라며 “이제 이런 불편을 끝내기 위해 부서 이동 없이 끝나는 원스톱 통합 민원서비스로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익산, 불만 없는 행정 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35년간 경찰로 살아온 조 전 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며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며 “청렴하고 정의로운 안전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도시 △여성이 반갑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장애인·노인·1인가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도시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는 1천만 관광객도시 익산 △사회적 약자가 가장 안전한 도시 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전 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고 청렴은 미덕이 아니라 도시의 기초”라면서 “시민과 함께 청렴하고 안전한 익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의로운 도시 익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도-시군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 | 민선8기 제7차 정책협의회 개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정상화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뜻 모아  
민선8기 협력 성과 공유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민선 8기 동안 함께 달려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는 3일 전주 왕의지빌 컨벤션에서 ‘함께 뛰어온 도전의 시간.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가 참석해 도정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안 물류 거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전북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에 뜻을 모았다.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장수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초의 도전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로 여는 산악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민간의 산악레저 스포츠 전문성을 지역 산악자원에 접목시켜 장수를 산악레저의 성지로 만든 사례를 선보여 큰 호응을



3일 전주 왕의지빌 컨벤션에서 ‘함께 뛰어온 도전의 시간.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1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얻었다.

최우수상은 전주 함께리만, 함께리페 등 전주 함께리리즈 확대 운영으로 주민 주도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한 전주시가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고창군-롯데월드 호텔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출시로 지역경제 회복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전주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 등 민선 8기 도-시군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와 시군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역점 시책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새만금 글로벌 규제 ZERO특구 지정, RE100 가속화와 주력산업 친환경 전환,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제시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더불어 잘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해선 우리가 아는 것을 언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가 시·군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도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정치권, 12·3 불법계엄 1년 맞아

## “내란 청산·사법 개혁”

“국힘 해산·윤석열 3년 전복 피해 복원” 촉구 거세

2025년 12월 3일, 지난해 발생했던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북 지역 정당 및 정치인과 단체는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의 반헌법적 폭거를 규탄하며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형직 대통령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도의회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 등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해 계엄 사태를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내란행위”로 규정했으며, 이는 전북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생활 재난”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과 함께 사법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전권희)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추경호 영장 기각 사례 등을 들며 처벌받은 내란 공범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지적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사법 농단을 끝내기 위해 국회에 ‘내란정당대판부’를 즉각 설치하고 조희대 대법원

장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2·3 사태가 우발적 돌발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의혹을 드러냈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구조적·제도적 사법 개혁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북이 미래를 잃었다며, 전북 지역에 남긴 상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이 잃은 것은 단순한 예산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 길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망가진 전북을 복원하고 AI·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삼일대표 조지훈)는 12·3 계엄 선포부터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의 과정을 “빛의 혁명”이자 K-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증명한 대장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흑한과 폭설에도 굴진했던 시위대와 ‘응원봉’의 반짝임을 동력으로 삼아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짜 전북’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북 정치권과 각 정당 및 단체는 광장의 승리를 지역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미완성에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과 국민의힘 해체를 동시에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도당 “전북 국비 10조원대… 기회의 문 활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은 3일 성명을 통해 내년 도 전북 국가예산이 10조884억원으로 확정되며 “전북의 미래를 열 새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천여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당은 이번 성과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연계된 신규 사업 예산 확보 덕분이라며,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낸 전북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매년 난항을 겪었던 새만금국제공항·인입철도·연결도로 등 핵심 SOC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쌓인 역물함

이 이번 예산에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할 퍼지컬AI 연구개발 생태계,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K-컬처 거점,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등 신규 성장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되며 지역 산업 구조 변화가 기대된다.

도민 체감형 예산으로는 전북권역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농어촌기초소독 시범사업 장수군 추가 등 14개 시·군의 숙원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다만 진안군 제외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예산 확보 과정에는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전북 정치권, 김관영 지사와 14개 시·군수, 공무원들의 총력전이 큰 역할을 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 대도약’ 위한 핵심사업 예산 증액 이끌어내

민주 정동영 의원, 피지컬 AI 등 국가전략 예산 확보

전주가 2026년도 국가예산안 통과로 미래 기술과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일 국회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은 전주 핵심 사업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 냈다.



정 의원은 관철한 주요 예산은 △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2년차 766억원 △AI 신뢰성 검증 허브센터 구축 10억원 △전주역 시설개선 80억원 △국립 전주전통과학관 당당성 용역 5억원 △전주 솔로몬 로파크 신축 설계용역 2.6억원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퍼지컬AI를 비롯한 국가전략 예산 확보는 전주가 기술혁신과 과학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증액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겨울철 재해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3일 2025~2026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형배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주천서로 도로리골 제설 전진기지 조성지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제설대책 개선방안, 겨울철 제설 전진기지 운영 방안 등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또 제설장비 배치 및 가동상태, 염수·제설제 비축 현황, 긴급 제설 작



업 및 초동 대응 계획, 인력 배치 등 제설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권희성 기자